미국-이라크전 대비 원유 확보전쟁

FT, 미국은 전략비축유 확대 … IEA 회원국도 재고비축 의무화

미국의 이라크 공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유 재고 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Financial Times(FT)가 8월7일 보도했다.

FT는 중동의 긴장고조로 전기 및 휘발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안보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각국 정부는 9.11테러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격화,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라크 공격과 이에 따른 원유 수입차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비축유(SPR) 비축 상한선을 현행 5억8000만배럴에서 2005년까지 7억배럴로 확대하는 한편, 세계 각국도 비축유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억배럴은 위기시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80일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석유 안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비축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6개 회원국이 최소 수준의 석유 비축량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도 석유안보에 대한 우려를 극명히 입증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26개국 중 석유 수입국들은 최저 90일분의 수입량을 비축토록 의무화했다. 석유 수출국인 캐나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은 제외됐다.

다만, 영국과 덴마크는 IEA 회원국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소 90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유지토록 규정한 유럽연합의 자체규약에 따라 의무비축량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IEA 회원국 중 특정국가의 원유 수입량이 7% 이상 감소하면 의무비축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2>